

주요 정책토론

본고는 1998년 7월 3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던 『제1차 사회보장발전계획(안)에 관한 공청회』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.

제1차 사회보장발전계획(안)에 관한 공청회

일 시: 1998. 7. 31. (금) 14:00~18:00

장 소: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

-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좌 장: 문태준 |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| 백종만 | 참여시민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장 |
| 주 제: 제1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 계획(안) | | 성규탁 | 미국 미시건주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|
| 발 표: 정경배 |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| 양봉민 |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|
| 토 론: 김상균 |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| 이 선 | 산업연구원 원장 |
| 김영배 |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| 이성재 |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|
| 김영평 |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| 이원덕 |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|
| 김홍신 | 한나라당 국회의원 | 이혜경 |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|
| 노진귀 |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| 조강환 | 방송위원회 위원 |
| | | 허영구 |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|
- (가나다 순)



1.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위치

- 우리나라는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정부주도적 경제운영방식에서 탈피, 민주적 시장경제운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변혁기에 있음.
- 사회보장제도는 경제위기하에서 국민을 경제·사회적 위험에서 보호하는 사회안전장치로써 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함.
- 4대 사회보험(연금, 의료, 고용, 산재), 공공부조,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지난 경제성장을 토대로 기본 틀은 마련되었으나 질과 내용면에서는 미흡한 실정임.

〈사회보장제도 질적수준의 미흡〉

- 4대 사회보험의 경우 제도는 있으나 의료보험을 제외하고는 전국민을 포괄하지 못하여 제1차 안전망으로서의 완전한 역할 수행이 어려움.
- 1차 안전망에서 제외된 상당수의 저소득층이 2차 안전망인 공공부조

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.

- 사회복지서비스는 외형상 해당 프로그램은 다양하나 시설보호 중심으로 되어 있는 등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미흡

〈복지재정 지출 및 행정체계 측면〉

-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복지재정 투자는 현경제수준에 비해 미흡한 상태
- 사회보장 행정체계 또한 전문적·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고 제도별로 분리운영되는 등 공급자 편의 위주로 되어 있는 상황

2. 향후 5년간 복지수요 전망

- 향후 5년간은 현재의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저성장, 저소득, 고실업으로 취약계층의 증가 및 빈부격차가 확대될 전망.
 - 1998년은 마이너스성장이 불가피하며 실업률의 경우 향후 5년간은 5% 이상의 고실업률이 지속될 전망

1998~2003년 경제전망

(단위: %, 억불)

	1998	1999	2000	2001	2002	2003
성장률	-4.2	1.8	4.9	5.3	5.4	5.3
경상수지	348	186	110	94	77	41
실업률	7.1	7.2	6.1	5.3	5.1	5.0

자료: 한국개발연구원.

- 핵가족화, 산업화 등에 따른 가족부양기능의 약화 및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적 변화로 향후 5년간의 국민 복지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
- 따라서 현재의 사회보장제도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과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진복지제도로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 대두

3. 기본 방향

『성장과 복지』의 조화

- 『성장 혹은 복지』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탈피, 경제성장과 국민복지의 조화를 통한 국가의 장기적 균형발전을 도모

생산적 복지이념의 추구

-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등을 통하여 복지가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생산적 기능을 강화하며, 복지가 소비라는 인간 중심의 개발 전략을 통해 성장력을 키워주는 투자적 개념으로 전환

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의 조화

- 서구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에 대한 경험과 우리의 상부상조정신을 발전시켜 한국적 복지제도 기반의 구축과 한국에 적합한 복지모형을 개발

사회보장 각 부문별 기본방향

부문	기 본 방 향
사회 보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4대 사회보험제도의 적용확대로 전국민 사회보험 실현 • 급여와 부담수준의 적정화를 통하여 보험재정의 장기적인 안정 도모 • 4대 사회보험의 통합추진으로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확립
공공 부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활보호대상자의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된 한계계층을 흡수 • 생활보호수준의 향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의 기본적 생활을 완전보장 •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자립·자활시책을 대폭 강화
사회 복지 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설보호 위주의 치료적 차원에서 가족·지역사회중심의 예방적 복지로 전환 • 노인의 소득 및 의료보장시책의 강화를 통한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• 장애인의 완전평등과 원활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자활·자립에 필요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• 아동의 안전과 요보호여성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
복지 행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을 통하여 공급자에서 수요자중심으로 전환과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 • 사회복지시설 운영 합리화 및 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
복지 재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민적 복지수요의 증가에 대응, 복지재정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확대 • 민간의 복지 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총체적인 복지역량을 극대화

4. 추진계획

사회보험

- 사회보험 적용대상의 전국민 확대
 - 2003년까지 전국민 대상 『1인1사회보험제도카드제도』를 도입
- 사회보험제도의 『적정부담·적정급여』체계의 확립
 - 사회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급여·부담·국고 등 3자가 자동연계된 부담 수준에 상응(Burden-benefit Matching)한 급여체계 중심의 자동안정장치 강구
- 4대 사회보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보험간 정보망 연계체제를 2000~2002년간 구축하며 2002년까지 4대 사회보험 통합관리를 목표로 보험료의 통합 징수체계 마련후 단계적 통합 추진
- 국민연금
 - 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40년 가입시 70%인 현행 급여수준을 55%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(ILO 권고 수준은 54%임)
 - 정기적인 보험재정 재계산제도 도입과 기금운용의 전문성·투명성 확보
- 의료보험
 - 다보험자체제의 보험관리기구를 2000년까지 통합 『적정부담·적정급여』체제로 전환
 - 급여기간 제한을 2000년까지 철폐하고, 급여범위를 확대하며, 의료보험 진료비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 2001년부터 포괄수가제(DRG)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
 - 진료비 심사의 공정, 진료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의 질 평가 기능을 갖춘 독립된 『진료비 심사평가원』을 2000년까지 설치 운영
- 고용보험
 - 1998년 10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임시·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을 확대하고 급여수준의 확충 및 급여체계의 합리화 추진

- 산재보험
 - 2001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, 급여체계의 선진화 및 재정부과방식의 개선으로 장기적인 재정안정도모

공공부조

-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축소
 - 실업급여 및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계계층(1998년의 약 105만명 예상)을 생활보호대상자에 편입·보호
 - 생활보호대상자의 확대수준은 1차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의 확충계획과 연계하여 신축적으로 조정

연도별 생활보호대상자수 추정치

(단위: 만명)

구 분	1999년	2000년	2001년	2002년	2003년
계	215	215	181	149	116
전인구대비(%)	4.6	4.6	3.8	3.0	2.2

주: 1998년 7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수: 148만명(한시보호대상자 31만명 포함)

-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기준의 개선
 - 개정 생활보호법에 따라 1999년도에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
- 생활보호 범위확대 및 지원수준의 상향조정
 - 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대여제도를 1999년에 도입
 - 3차 안전망으로서 일시적 긴급보호제도를 1999년에 도입하여 긴급상황으로 기초생계유지가 어려운 한계계층 실업자, 노약자, 난민 등에게 생존에 필요한 긴급식품보호와 긴급의료보호를 실시
 - 보충급여·주거보호제도를 2000년까지 도입하여 거택보호대상자를 지원
- 자활지원 시스템 구축
 - 생업자금융자 대상자 확대 및 저소득 밀집지역 빈민층의 재활을 유도하

- 기 위한 『자활지원센터』를 2000년까지 전국 읍·면·동 사무소에 설치
- 의료보호수가를 2001년부터 의료보험 수가와 동일수준으로 상향조정하며 의료보호 급여도 의료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확대해 의료보험과의 차이를 해소

복지서비스

-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
 - 문제가정의 발생 및 가족해체의 예방을 위한 종합상담서비스체계를 2000년까지 구축: 시·군·구별로 1개의 『종합상담기관』을 지정하여 상담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누구든지 쉽게 상담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
 -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 노인 등 불우노인, 요보호아동, 무의탁 장애인 등과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결연사업의 확대 및 후원의 질 제고
 - 재가봉사센터를 2001년까지 전체 사회복지관으로 확대(268→329개소)
-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의 확충
 - 경로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노후소득 보장 강화
 - 노인대상 보건·의료서비스의 질 제고→『노인응급정보시스템』을 2003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
 -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서비스를 확충
 - 자립가능 노인을 지역봉사, 유급 봉사원 등으로 활용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
-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
 - 장애인 범주의 단계적 확대와 생계보조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강화
 -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 취업기회 증진(⇒ 고용률 2% 초과시 지급되는 장애인 지원·장려금 확대)
 - 장애인 재활 지원체계 강화와 공공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

- 아동의 건전육성 및 권리보장
 - 아동상당기능 활성화와 가족형태(그룹홈) 보호제도의 확대(1998년 10개소 → 2003년 30개소)를 통해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
 - 아동의 권리 및 안전보장에 관한 법적, 제도적 장치 마련
 - 영아, 장애아 보육시설의 확충(2002년까지 매년 30개소씩 설치) 및 질적 개선과 아동수당 도입(2000년) 검토
- 저소득층 여성의 생활기반 조성
 -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지원 촉진(생업자금 융자, 자녀의 학비지원 등)
 - 미혼모 발생 예방을 위한 성교육 확대 및 성폭력 예방 및 피해보호 강화, 『여성1366』상담전화 확대 설치

복지행정 및 복지자원

- 고객 만족의 복지서비스 제공
 -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복지행정업무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프로그램 개발
 - 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실시를 통한 전문성 제고 및 자격제도 체계화
-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
 - 읍·면·동사무소를 『종합복지센터』로 전환, 수요자를 위한 One-stop-service 구축
- 사회복지시설 운영 선진화
 - 1999년부터 시설평가제도의 실시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합리화 및 내실화를 이루고, 시설 입소자격 완화를 통하여 국민의 시설이용기회를 확대
- 복지재정의 적정화
 -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향후 5년간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재정확대 검토와 공동모금제도와 자원봉사제도 등 민간복지자원의 활성화